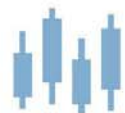




WP 19-09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정립 방안

정은진 국토연구원 연구원(ejjeong@krihs.re.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정립 필요성	05
02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관련 법·제도 현황	09
03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13
04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 탐색	17
05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 제안	25
06 정책 제언	31

01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정립 필요성

-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공간 단위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작됨
 -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외곽 신도시 개발 등의 외연적 도시확장, 건설 정책이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과거 공공이 주도하여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을 둔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과 달리 공공, 민간,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 20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33개소 선정 및 추진을 통해 본격화되었음
- 초기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도시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참여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국토교통부 2017, 7)한다고 하였으나,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현장기반의 사업지원이 요구되면서 특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역할로서 현장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됨
 -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장소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역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필수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 현장의 거점으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함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도구로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 특화발전과 자립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년 동안 매년 100곳, 10조 원의 자금 투입(총 500곳, 50조 원)을 통해 낙후하거나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1500억 원 수준으로 전국 46곳에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와 범위 면에서 현저히 확대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관리 주체와 역할 확장 요구도 필연적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사업추진과 관리체계 확립하고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의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연구원을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기구로 활용·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광역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함
- 덧붙여,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참여기반 구축을 통해 bottom-up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위해 주민 서비스의 통합플랫폼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300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함(국토교통부 2018, 2)

표 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의 주요 내용 및 세부 내용 정리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별 ‘도시재생대학’ 확충(2018년 50개 이상 → 2022년까지 200개 이상) ② ‘소규모 재생사업’ 도입(2018년 4월, 연 50곳),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2018년 4월, 연 60곳) ③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2022년까지 300곳 이상), 주민 서비스의 통합플랫폼화 	<p style="text-align: center;">〈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세부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3.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3. 광역지자체 거버넌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가 권역별 뉴딜사업 및 지역중심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전문역량 강화(2018년 4월) •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추진,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연구원을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기구로 활용 추진(2018년 상반기)

출처: 국토교통부 2018, 5, 35.

- 2019년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0여 개이며, 행정위계별로 광역·기초·현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주도의 사업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각 위계별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실정임
 - 특히,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의 경우 16개의 지자체별 센터가 설립되었으나 하위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초·현장 지원센터와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위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는 광역지원센터 현황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광역지원센터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개선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02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관련 법·제도 현황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도시재생특별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설치 및 운영, 위탁,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례에 나타난 센터의 역할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김예성 2017,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규정된 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② 주민협의체 지원, ③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④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임
 - 도시재생국가기본방침에서는 역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동일하게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계획수립 지원,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참여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원활한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지원하고자 발간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구성과 역할,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중임

 -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 이전, 2014년 최초 발간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역할과 세부내용을 제시함
 -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소규모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밀착형 사업계획과 활성화지역 내에서 주민체감형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자 2016년 개정·발표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현장지원센터 설립을 권고함

■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주도의 사업추진과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광역자원의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지속되자, 2018년 발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처음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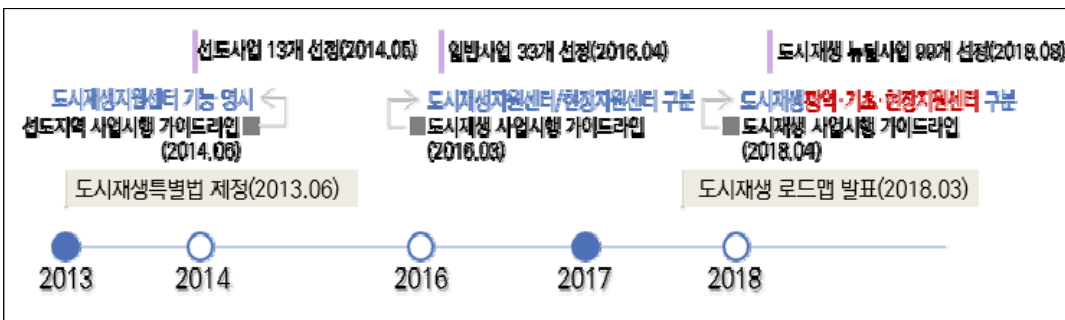
- 2018년 발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설치 권고를 달리하고 있음
 -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원형은 광역지원센터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았지만,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각 담당 범위에 따라 구분함
 - 이후 개정된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유형을 동일하게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를 명시함

표 2 도시재생 가이드라인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구분 여부

분류	연도	유형	가이드라인명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역	기초	현장
선도 지역	2014	전체 유형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 지역	2016	전체 유형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	○
	2017(개정)				(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뉴딜 지역	2018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	○
		일반근린형			(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2018(개정)	전체 유형		○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전체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가이드라인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제도 변화



출처: 저자 작성.

-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9가지를 제시함

표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 ④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 ⑥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⑦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 ⑧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 ⑨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출처: 국토교통부 2017, 8.

- 현재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설치를 권고하면서 광역지원센터와 기초·현장지원센터 간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없도록 구분된 역할 수행의 필요성과 함께 예시적 역할을 제안하고 있음

- 예시로 제시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으로 7개 분야 15개 업무로 나누었으며, 기초·현장센터와 구분하여 제시됨

- 가이드라인에서 센터 역할을 구분하여 예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운영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역할 정립에 필요한 제도가 전무함

- 특히, 광역지원센터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군 간 계획의 연계·조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등 행정이나, 기초·현장지원센터 지원 등에 필요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표 4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구분(예시)

구분	광역	기초	현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뉴딜사업 지역)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 제도 발전 조사·연구 • 전문가 육성·파견 •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실적평가 관리 지원 • 기초·현장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단위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위 주민·상인 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등 지원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군 간 계획의 연계·조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구)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지원 • 지역자원 및 잠재력 조사 지원 • 사업과정 기록화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협업사업 발굴·연계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문가 육성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자체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기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활동가 육성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운영
주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조정 및 참여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상인협의체 조직화 및 운영 지원 • 주민의견 조정, 상담 및 참여 활성화 지원 • 아이·어르신돌봄, 방과후 학습 등 공동체활동 지원
일자리·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박람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 지역 언론사 간담회, 기획홍보, 사례지 팸투어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홍보 • 주민주도 홍보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신문 등 정보교류 매체 제작·배포 • 마을행사·축제 기획

주: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광역, 기초, 현장 간 유연하게 적용·운영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2018, 9.

03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8월 기준 전국 176개소로 조사되었으며,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중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임
 - 2017년 10월 조사 당시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77개소(정은진 외 2018)로 파악되었던 것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광역지원센터도 대부분 설립·운영 중임
 - 이는,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가 권고에서 필수로 강화되었고, 도시재생사업 계획 평가인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서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는 등의 결과로 보임

표 5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현황(2019년 8월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	24	11	6	9	5	5	5	1	27	14	11	7	15	9	13	11	3
광역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	1	1	1
기초	89	8	9	2	8	2	0	1	0	14	9	3	3	7	7	11	6	0
현장	69	15	1	3	0	2	4	3	0	12	4	7	3	7	2	1	4	2

주: 광역지원센터는 2019년 8월 현황조사를 재시행하였으나 기초 및 현장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된 개수로
현시점 설립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16개소 중 부산, 대전, 대구 등 7개 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었던 2017년 이전 설립되었으며, 강원, 충북, 충남 등 10개소의 광역지원센터가 뉴딜사업 이후 설립되었음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상 광역지자체의 거버넌스를 지원함에 따라 17개 시·도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권고하고 있으며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 광역지원센터의 설립형태는 공공위탁이 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위탁의 경우 인천, 울산, 전북 등 지방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강원, 충북, 충남 등 지방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민간위탁과 재단법인이 각각 2개소, 행정직영이 1개소로 나타남

- 기초·행정지원센터의 설립형태가 대다수 행정직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광역지원센터는 민간·공공위탁 유형이 많은 이유는 현장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역주민, 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최우선시 되는 현장·기초지원센터와 달리 광역지원센터는 전문성과 기초·현장을 총괄하는 포용적 조직 성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 조직의 지역기반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위탁(지방도시공사 및 연구원)이 선호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설립형태에서 뉴딜사업 이전에 설립된 광역지원센터는 설립형태가 다양한 것에 반해, 뉴딜사업 이후 설립된 센터의 설립형태는 모두 공공위탁인 것은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기업·지방연구원 등 활용’이라는 가이드라인의 권장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 6 전국 광역지원센터 설립 현황

순번	지역	센터명	설립형태	수탁기관	설립일
1	서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주)커런트코리아, (주)역사만들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컨소시엄	2017.07.06
2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법인	2015.06.01
3	인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인천도시공사	2018.03.05
4	대구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대구경북연구원	2015.06.01
5	광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재단법인	2017.09.05
6	대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대전발전연구원	2015.06.24
7	울산	울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울산도시공사	2019.06.04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직영	2015.09.24
9	경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경기도시공사	2016.05.20
10	강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강원연구원	2018.09.17
11	충북	충북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충북연구원	2019.06.07
12	충남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충남연구원	2019.06.18
13	전북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전북개발공사	2019.07.01
14	전남	미설립		-	-
15	경북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경북개발공사	2019.06.03
16	경남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경남발전연구원	2018.10.22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단체	2016.08.24

주: 음영은 도시재생뉴딜 이전에 설립된 광역지원센터임.
출처: 저자 작성.

■ 공사나 연구원으로 위탁한 광역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간 임대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 기관의 경험과 역량, 전문 인력, 기관이 가지는 지역 내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지역의 도시지방공사를 활용은 기존 도시지방공사가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로서 주거지 정비와 혁신거점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 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둬으로써 계획수립에서 사업실행까지 적극적 협력이 용이하며 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음
- 지방연구원은 해당 지역 도시정책 발굴,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 내 도시정책 연구를 주고 담당하며 지역 전문가의 핵심조직으로서, 연구원 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계획과 연계한 도재생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지체 도시재생 정책 발굴, 전문가 네트워크 등 견고한 기반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음

■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장지원센터와는 달리 광역지원센터는 센터의 설립시기를 비롯하여 지자체에 따라 부여되는 역할과 범위가 상이해 설립 목적이 다양함

- 특히, 도시재생뉴딜 이전에 설립된 광역지원센터의 경우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국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됨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세종시가 국가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프로젝트 추진의 거버넌스 거점 조성 필요성에 따라 설립이 추진됨(임상연 외 2017, 55)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 운영되던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도시재생선도 사업을 흡수하면서 통합운영과 안정적 센터운동을 위해 센터를 개소함
 -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지원사항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역량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설립됨(이왕건 외 2016, 63, 재정리)
-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설립된 광역지원센터는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기초·현장 지원센터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정책 발굴, 지역 전문가 양성, 기존 도시재생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설립됨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과 기관을 잇는 일종의 연결고리로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기초·현장센터와 지역활동가를 지원하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대다수의 광역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계획 수립·지원,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 홍보,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여건과 센터의 상황에 따라 예산 및 구성인원¹⁾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나타남

- 개원 3년차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정립을 위하여 도시재생기업(CRC)육성 지원사업, 서울형 집수리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지원사업과 교육 분야와 대상에 따라 차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13개 교육프로그램, 서울 도시재생포털 관리 등을 위해 총 45명이 60억 원 예산 규모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올해 개소한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3인,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모델을 구축하고자 도시재생 정책지도 작성,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교육, DB 구축 등 초기 기반조성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표 7 전국 광역지원센터 업무 현황

순번	센터명	업무 현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	○	○
2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4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	
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	○	○		○	○	○	○	○
6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7	울산 도시재생지원센터			○			○	○		
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9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10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11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12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13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14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15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1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주: 1)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④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⑥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⑦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⑧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⑨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본 조사는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광역도센터 현황조사, 저자의 센터 홈페이지 및 메일링을 통한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나 실제업무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

1) 최근 설립된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부분 인력 3~5명 내외, 예산 3~6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계획 컨설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자체 수요에 따라 관련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04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 탐색

- 본 장에서는 광역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지자체 전담조직 담당자, 센터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7년 설문조사²⁾에 따르면, 기초·현장지원센터는 광역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에서 ① 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육성 혹은 파견 지원, ②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③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나, 항목에 대한 세부 역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표 8 2017년 진행된 조직 위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요 역할 설문 조사 결과

1) 광역지원센터	2) 기초지원센터	3) 현장지원센터
① 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육성 혹은 파견 지원 ②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③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①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②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③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①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②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③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출처: 정은진 외 2018.

- 이번 서면질의를 심층면적조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안)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각 업무에 대해 센터별 역할 배분, 세부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음
 - 지자체별로 광역·기초·현장 지원센터 위계가 구축된 지 1~2년차의 운영 초기로 이러한 행정체계 속에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상자³⁾를 중심으로 시행하였음

2) 설문결과는 2017년 10월 기준 운영 중이었던 77개소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설문에 참여한 5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직위계별로 센터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중 광역지원센터의 내용을 추출하여 재정리함 (정은진 외 2018).

- 각 분야 대상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반적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박사 이상의 근무자로 한정하였으며, 행정조직 관계자 2명,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8명, 학계 전문가 3명 총 12명을 선정⁴⁾하였고, 관련 조사는 서면질의회와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의 방법을 사용하여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함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초·지원센터가 계획에 대한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전략계획 차원에서 도시 간의 계획 연계, 부처협업사업의 연계, 계획과 사업 추진에서의 방향 설정 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역량구축, 전문가 매칭, 기초지원센터의 계획 수립 지원 방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제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초와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의견 제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기초나 현장지원센터에 비해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광역지원센터가 활성화계획을 컨설팅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는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알선 업무, 타 지자체의 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계획 수립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광역 지역 내 전문 인력pool 구성 및 운영·지원하고, 기초·현장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의 행정편의 또는 용역사의 업무편의 중심의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의견수렴 지원” △△△ 도시재생 전문가

“전략계획은 광역센터가 중심이 되어 탐다운 방식으로, 활성화계획은 현장, 기초센터가 중심이 되어 바텀업 방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국토교통부 사무관

3) 본 연구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조사 대상을 행정 조직 관계자(국토교통부 및 기초자치단체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등),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기관 등)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광역도)센터 현황조사와 각 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조사 및 메일링을 통한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0년 이상 경력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약 200명 내외로 추정함.

4)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있어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샘플링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조사 대상의 수 부족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보완이 필요함.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 의견조정은 사업현장과 밀접한 현장·기초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광역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유형화하여 효율적인 갈등해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초 및 현장 센터의 주민의견조정 업무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취합하여, 관련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주민의 의견조정 업무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고 반영하는 역할은 기초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직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국비사업선정이 안된 현장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광역지원센터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고 돕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힘들어요.” □□□ 광역지원센터 팀장

“우리는 주민 의견들을 듣고.. 쉽게 말하면 민원이죠, 이런 일을 하는 기초·현장지원센터 코디나 활동가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장. 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요.” ◇◇◇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3)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필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나 대다수의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교육의 대상, 과정, 수업 방법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 수 있도록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제시됨

“대부분의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인데, 지자체별로도 행정위계별로도 차이가 없고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현가능성 평가 항목으로 교육 횟수 채우기에 급급한 지자체도 많다.” △△△ 지원기구 관계자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분야에서 유명한 도시재생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고, 또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우리 센터에서 전문가를 대신 섭외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 광역지원센터 팀장

“광역지원센터에서 왜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지원센터와 어떤 차별화를 두는지도 모르겠고 지역에서는 일할 전문가를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광역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 교육이나 발굴을 통해서 업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실습형 교육을, 광역지원센터에서는 이론, 정책과 같은 전달식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

△△△ 국토교통부 사무관

4)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도시재생대학 과정 교육을 통해 양성되거나,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을 통해 발굴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함(○○현장지원센터)

- 이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의 조직을 발굴·양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되기까지 그들의 도우미 역할이 되어야 함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겨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생성되거나,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을 통해 발굴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마을기업관련 교육과 연계하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전문가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실패했더라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경험인데, 의회나 언론에서 실패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실패로 단정지면 안돼요. 이런 지원은 확대되어야 맞죠.”

▽▽▽ 도시재생 공무원

“광역지원센터는 분야별 지역전문가 pool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전문가 매칭 및 운영 노하우 전파해야 함.”

○○○ 국토교통부 사무관

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참여가 관내 단체, 지역 유지 등을 중심으로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 코디, 활동가가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주민과 함께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광역지원센터는 인건비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코디, 활동가 인력을 양성·파견하여 능력 있는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함(○○○ 현장지원센터)

6)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주민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광역지원센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 대응 등 타 부처 및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기초·현장센터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 또한, 광역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왔고, 시·구·군별로 도시재생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만큼 센터가 각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시·구·군 도시재생사업을 조정,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함(◇◇◇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광역차원에서 기초·현장지원센터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등 효과가 있다. 그러나 광역센터는 이들의 의견전달자일 뿐 지역 내에서 그것을 해결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위지원센터의 협조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 광역지원센터 팀장

“주민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현장·기초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광역지원센터는 광역 내 지역 간 센터, 타 부처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기구 관계자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철도청, 도시공사 등 타 부처나 기관과의 협회가 필요한데 지자체는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해 광역·중앙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지원센터가 지역중간지원조직의 협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 전문가

7)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 사업 또는 지자체 단위 홍보는 홍보내용, 기사의 질, 대상 등 활동의 효과가 담보되지 못하고, 대부분 무리한 소식지 발간 및 소식지의 무분별한 배포를 통한 사업성과 만들기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마을방송·미디어의 경우 홍보 내용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적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차원에서 홍보내용의 수준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사업홍보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홍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센터 인력들이 홍보에 에너지를 쏟기에는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만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8)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차별 추진실적평가에 의해 겨우 성과를 측정하는 등 운영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나 성과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향이 있음
 - 대부분의 일반지역, 뉴딜지역(2017년 선정분)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특히, 도시재생사업 선정권한이 일부 광역지자체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관리 및 책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바, 광역의 지원조직인 광역지원센터는 센터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목표 수립 및 평가측정 등 모니터링까지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총괄적 지원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특히, 기초·현장지원센터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광역행정과의 관계를 활용한 평가지원을 병행하여 관내 사업을 독려할 수 있음

“광역지원센터가 관내 도시재생사업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역여론을 너무 잘 아는 위치에서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에 결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광역지원센터가 평가 전에 컨설팅을 함으로서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평가과정에서는 평가서를 검토해서 의견을 주는 정도의 역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000도 평가를 갔을 때, 광역지원센터 관계자는 볼 수 없어 의아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업수가 계속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언제까지 사업 선정 및 사업관리 전부를 담당할 수 있을까. 광역지원센터에 평가·사업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대해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행정의 업무로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재생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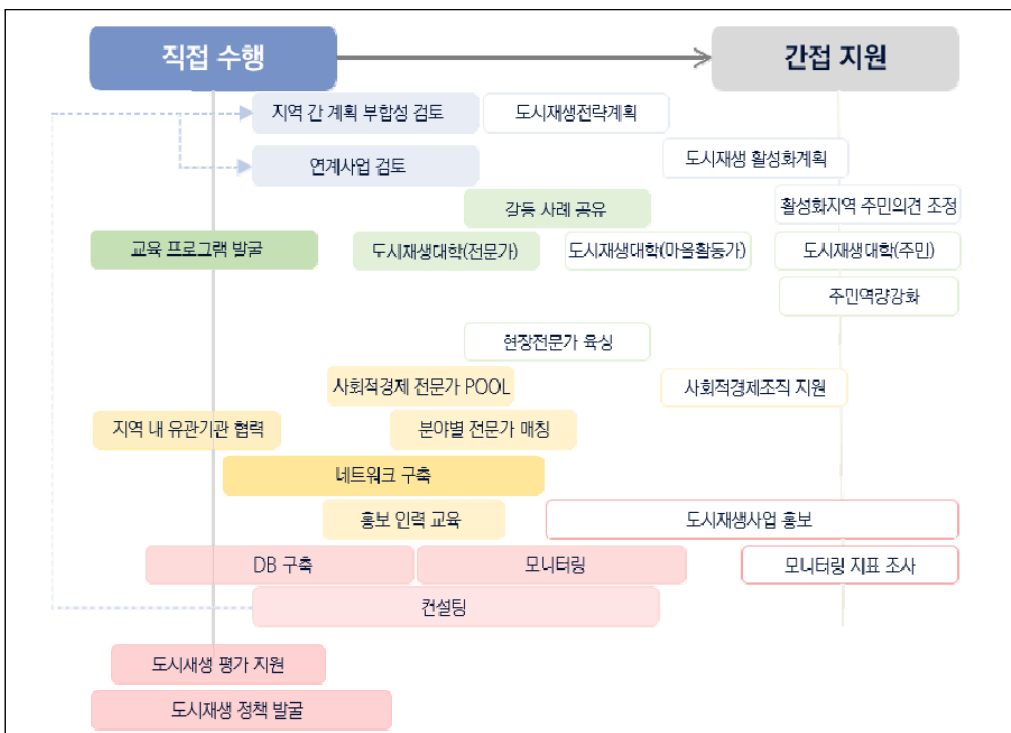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광역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평가와 관리 등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행정과 센터의 협업은 필수적이죠.”

○○○ 광역지자체 주무관

05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역할 제안

- 광역지원센터는 기초·현장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행정위계에 따른 업무분배를 통해 업무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과제나 수요, 아이디어 등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 정비,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하되 광역지원센터는 현장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기반 조성, 지역 재생정책 개발 등 간접적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함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광역지원센터는 광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초·현장지원센터의 적절한 역할 분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개진되었음

그림 2 광역지원센터의 직·간접 업무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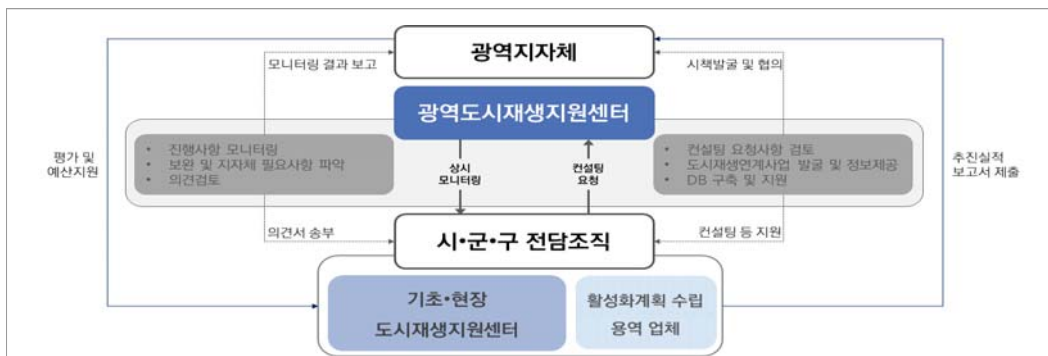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1)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지원 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평가·관리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평가 및 평가 검증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중앙 지원기구(나,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하던 도시재생사업 선정·실적 평가 지원업무 역시, 광역지자체의 지원조직인 광역지원센터로 이관되어야 함
 - 기존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도시재생사업 평가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원기구 1인당 10개소 내외 담당), 실제 평가 과정에서 검토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
 -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원센터는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광역단위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및 사업 지원, 전문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광역지원센터는 전략계획 이슈 발굴 및 활성화 위주의 총괄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사업평가를 지원해야 함
 - 광역지원센터는 단일 지역의 활성화계획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계획 연계, 부처협업사업의 연계, 계획과 사업 추진에서의 방향 설정 등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시행하되, 각 분야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를 네트워크화하여 적합한 지역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기초·현장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업DB 구축, 지역의 효과와 실행가능성 검토,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한 관내 도시재생 정책 발굴 및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지역과 밀접한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사업 현장에 대한 수요와 현황 파악, 데이터 구축 등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광역지원센터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출처: 서수정 외 2014, 34, 저자 재작성.

■ 충청남도의 경우 지속적인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도 단위의 정기적·일괄적 사업 모니터링을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통적인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는 장소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과 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임(충남연구원 2019)

2) 체계적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 지역 역량 강화

■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 대상의 특성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 운영방식, 교육 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마련해야 함

- 도시재생대학은 지역 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창출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민,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지역개발에 관계된 기업(공기업, 사기업), 행정 등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전병혜 외 2017, 156)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초급과정은 주민의 접근성과 관심도 유발이 보다 용이한 현장·기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행정(전담조직)을 포함한 코디네이터, 지역 대학생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은 광역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등 행정위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분배·진행하여 기능을 차별화하되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강사진들의 전문성 및 교육방법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강의 프로그램의 중복성 문제는 운영 준비단계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전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교차검토가 필요함(전병혜 외 2017, 174)

■ 장기적으로 광역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광역지원센터가 사업지역 주민의 특성(인구구성, 참여정도 등)을 분석하여, 지자체 또는 사업지역에 적합한 전문가 및 프로그램 유형(학술기반, 사업기반, 실무기반, 갈등조정 등)을 제안하는 등 기초·현장 센터의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초·현장센터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강의계획서, 강의자료 등을 개발하여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 배양을 유도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및 분야전문가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현장을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등 광역지원센터는 교육지원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그림 4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교육 지원 및 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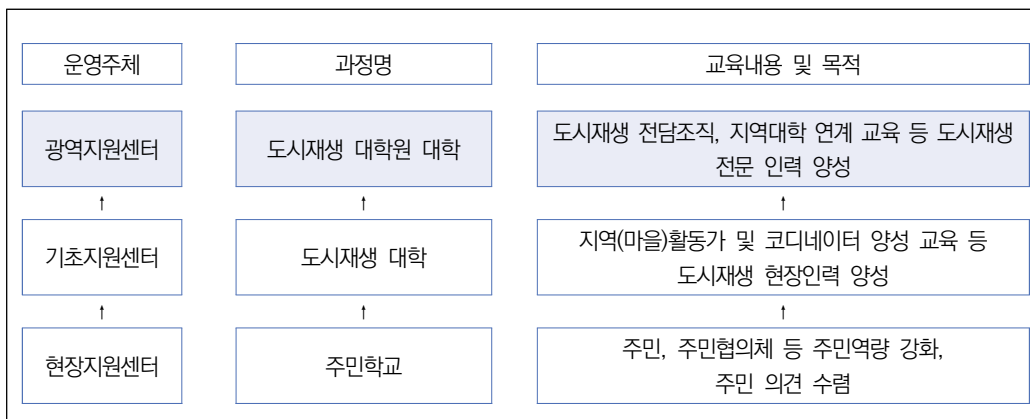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을 주민학교,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대학원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광역지원센터는 전담조직, 기초·현장지원센터 등 공공인력,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인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운영함

- 초·중급 과정인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학교는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 교육하되, 이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에서는 관련 교육DB를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초·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지역 내 체계적 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그림 5 강원도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체 및 내용



출처: 추용욱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터뷰, 저자 재정리.

3)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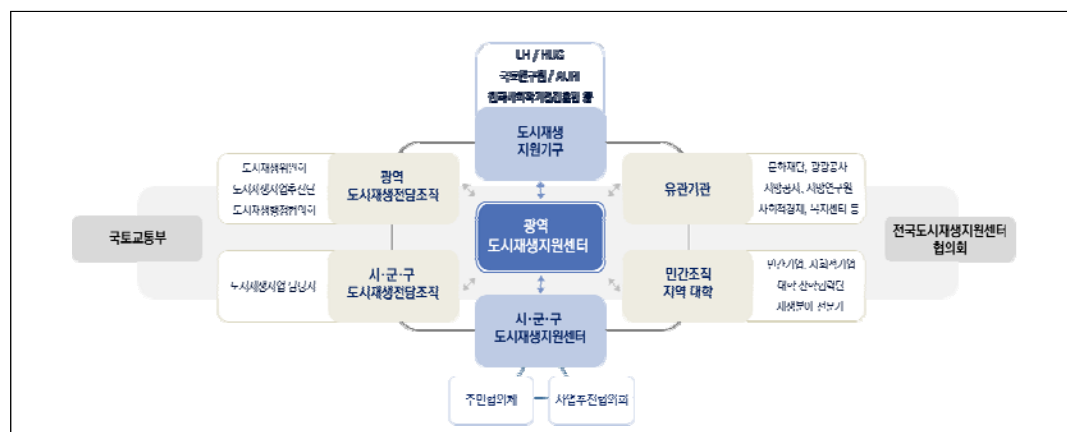
■ 광역지원센터는 지역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센터 간 현장자료 및 경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 지원해야 함

- 각 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 협의회, 기초·현장 센터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별 도시재생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학습 및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서수정 외 2014, 188).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역기반을 마련해 주고 나아가 그들을 육성하고 파견하는데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음

■ 광역지원센터는 기초·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넘어서 관내 민간조직, 대학,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 조직들을 상호 연계시켜줌으로서 재생사업에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정부에서는 부처협업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부처 사업과 운영 조직들은 그들의 개별법과 조례들을 근거하고 있어 사업에 즉각적으로 추진, 투입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제공,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사업 규모가 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의 경우 많은 사업이 서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장소중심적으로 각 지역에 정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협력구조를 이루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서수정 외 2014, 42)
- 따라서 지자체를 넘어 광역차원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림 6 광역지원센터 지역 네트워크 구축(안)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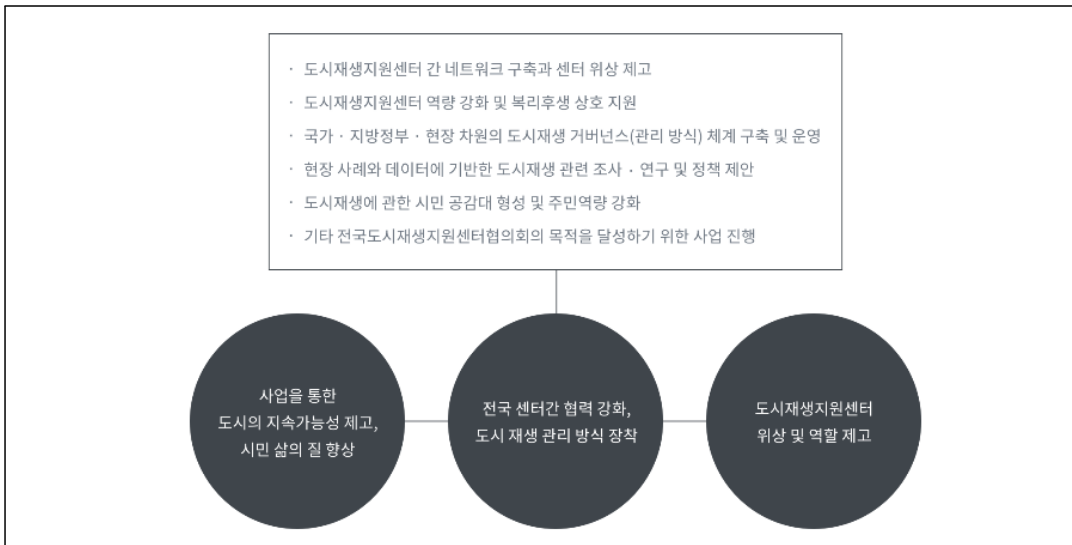
■ 최근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문화, 청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경제, 여성가족, 전통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과 교류를 위해 간담회와 세미나, 정기회의를 이어오고 있음

- 작년 7월에는 20개의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도시재생 뉴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 이러한 다양한 활동주체들과 실제 기획자들, 그리고 행정담당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함(이자복 2018, 84)

■ 한편, 2017년 창립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는 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 사업들이 보다 일관성 있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정부, 시·도 행정 및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과 센터 조직의 위상 제고와 센터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제안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기능



출처: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 한편, 중앙차원의 대표적 협의체이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토부를 포함한 16개 관계부처 장·차관의 정부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협의채널을 확대하고 지자체 사업을 지원함

06 정책 제언

- 이 글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사례조사를 통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 역할을 ①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지원 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체계적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 지역 역량 강화, ③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제안하였음
- 제안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 정립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함
 - 광역지원센터가 현장·기초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지자체와 정책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채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초·현장지원센터에서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인식이 아직 부족함
 - 센터 자체가 각 지역의 행정/재정/인력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광역지원센터는 대부분 최근 설립되어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 또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광역지원센터가 하위 용역기관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 협력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지원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센터를 인식하여야 함
 - 한편,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장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분석, 사례공유를 통해 제도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지역특성 및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서수정 외 2014, 90), 그에 필요한 센터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
 - 광역지원센터가 기초·지원센터의 지원 및 정책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센터별 필수 역할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나아가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재생의 지속성과 이를 위한 지원 등 센터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추가적 역할 모색이 필요함

■ 광역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조직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지원센터는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등에 위탁 운영 중에 있어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진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 및 효과, 실행가능성 등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구축된 사업DB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내 도시재생 정책 발굴 및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단기적 운영을 위한 조직형태에서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광역지원센터 예산은 전액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함에 따라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위한 의회 승인 등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부하는 국비 사업비 중 일부를 광역지원센터의 운영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광역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파견 등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함

- 현재 광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도시문제를 관리하고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구성원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 광역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도시재생센터의 구성원은 주민 참여를 위한 공동체 기반 형성,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지원해야 함에 따라 동일한 맥락으로 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근무안정성 지원이 필요함
- 광역지원센터는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 내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며, 조직 자체만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자체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사업 지원조직의 역할을 해야 함
- 광역지원센터 실무인력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관리 등 실무 능력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문 인력의 장기교육 또는 기초·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지원기구 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과 사업관리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지원기구 차원에서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리플렛
- 추용욱.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저자와 인터뷰, 7월 20일.
-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세종: 국토교통부.
- _____. 2018.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세종: 국토교통부.
- 김예성. 2017.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https://www.city.go.kr/portal/participation/socialCloud/supportCenter/list.do> (2019년 9월 22일 검색).
- 서수정, 박성남, 임강륜. 2014.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국도시재생센터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https://surc.or.kr/council/intro> (2019년 9월 28일 검색).
- 이왕건, 박세훈. 2017.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II). 세종: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 이자복. 2018. 대구 도시재생사업, 진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 국토 제443호. 세종: 국토연구원.
- 임상연, 정은진. 2018.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III). 세종: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 전병혜, 송혜승, 이명훈. 2017.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제4호: 155-182
- 정은진, 임상연. 2018.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위계별 역할 재정립에 관한 실증연구. 2018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 발표자료. 서울: 대한민국도 도시계획학회.
- 충남연구원. 2019. 도시재생DB구축(I), 내부자료.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19-09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진 정은진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